

[종합]

“셋째아 임신·출산·보육까지 지원합니다”

광주시 '출산장려 정책' 확대 시행 축하금 60만원...보육료 10% 감면

■광주시 셋째아 출산·보육 장려금		
지원부문	금액	신청방법
임신축하금	10만원	산모수첩 등 관할 보건소 제출
출산축하금	50만원	출생신고 후 관할 보건소 서류작성
제3아양육비	매월 10만원(생후 12개월)	동주민센터 서류 제출
보육료	매월 20만원(생후 36개월)	어린이집(보육시설)에 신청

(자료:광주시)

광주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아를 가질 경우 임신 축하 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셋째아를 보육 시설에 맡길 경우 광주시내 전 보육시설에서 보육료를 10% 일괄 감면해줄기로 했다.

광주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셋째아 출산 장려정책 확대 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셋째아 임신부에게는 임신축하금 10만원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축하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셋째를 가진 임신부는 임신 20주부터 출산전까지 산모수첩과 주민등록등본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셋째아를 집에서 기르면 생후 12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보육시설에 맡기면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사)보육시설 연합회와 협의를 갖고 셋째 아동에 대해 기존 5~10%씩 할인해주던 보육료를 10%로 일률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광주시내 1천여개 보육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보육시설 연합회는 이를 위해 광주시의 특

수시책사업인 '아이사랑카드사업'에 전 보육시설이 참여, 오는 3월부터 보육료 감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광주은행과 함께하는 아이사랑카드에는 2001년 이후 출산한 세자녀 이상의 가정이 가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206개 학원, 195개 음식점 등 817개 업체에서 5~30%의 할인이 이뤄진다. 아이사랑카드참여 및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http://isarang.kjbank.com)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유치원연합회와의 협약을 토대로 시행해오던 유치원비 10% 경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09년 2월까지 협약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이사랑카드” 가입업체를 늘리는 한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개발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062-613-328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여론몰이 e메일’

靑 행정관 구두경고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은 뒤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근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음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김유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었다.

/연합뉴스



하계 U대회 광주 유치 '서구 범시민지원단 발대식' 박광태 광주시장, 전주언 서구청장 등이 13일 광주시 서구 문화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 하계 U대회 유치를 위한 '광주시 서구 범시민지원단 발대식'에서 대회 성공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위경량기자 jrwi@kwangju.co.kr

전남, 7년연속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지역이 7년 연속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축산기술연구소는 최근 중국, 베트남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 등을 위해 도내 축산농가를 상대로 구제역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축산기술연구소가 이달 초 도내 축산농가 66곳에서 440건의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항체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실시한 1천500가구, 1만180건의 혈청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로 전남지역은 2002년 이후 구제역이 1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임이 다시 확인됐다.

축산기술연구소는 도내 구제역 발생방지와 청정화 유지를 위해 혈청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농장과 종돈장, 도축장을 대상으로 구제역 감염 위험성이 있는 소와 돼지, 염소 등 9천여건의 혈액을 채취해 집중 검사를 할 예정이다.

또 도내 8곳의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 등을 강화해 사전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조상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구제역 유입 가능성이 큰 시기인 3~5월까지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不정책 폐지, 사회적 합의 있어야”

교과부, 이르면 2013학년도 대입부터 폐지

교육과학기술부가 ‘3불’(보고사·교고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포함한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2012년 이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들이 ‘3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임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대입 자율화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될 대학입시 협의체에 교과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 자율화 후속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3불’(보고사·교고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비롯한 ‘대입 완전 자율화’는 2012년(2013학년도 입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임상현 학살연구정책실장은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임시안을 발표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세대는 인터뷰에서 2012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부터 사실상 보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경찰, 검찰조사前 대책회의”

민주 이석현 의원 의혹 제기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3일 경찰이 음산참사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당시 상황을 지휘했는데 검찰이 조사를 안했다”며 “이 사람은 지난 5일 기동본부 소회의실에 당시 현장에 투입된 5기동대, 13중대, 56중대, 11중대 요원들을 소집, ‘PD수첩’ 동영상 보여준 뒤 ‘검찰이 불러 나가면 용역요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와대 행정관이 보낸 e-메일 원본을 확보했다며 관련 문건을 손으로 흔든 뒤 “이 문건은 경찰청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도 보냈다”며 “연쇄살인 뉴스를 절호의 찬스라고 하면서 음산참사를 덮는데 쓰자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거냐”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시 설

기아차 노조 고등분담 적극 동참하라

기아차 노조는 지금이 호황인 줄 아는 모양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일부 근로자들이 야간에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야근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스포티지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공장 2공장의 야간가동을 지난달 5일부터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2공장 근로자 1천명은 생산라인이 멈춘 야간에도 출근해 야근수당을 받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회사사정이요 임금은 줄일 수 없다는 이기주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최악의 경제난 속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의 ‘빅3’는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세계 1위의 일본 도요타도 58년 만에 적자를 내고 감산에 돌입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노사가 힘을 합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관

국에 회사의 어려움은 나 몰라라 하고 내 몫은 다 챙기겠다는 기아차 노조의 행태는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노조로서는 잔업, 특근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야수당까지 없어지면 임금의 3분의 1가량이 삭감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임금 계층인 기아차 근로자가 임금을 줄 것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이는 결국 경쟁력 하락으로 고용불안이라는 부메랑이 돼 근로자에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의 ‘빅3’는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세계 1위의 일본 도요타도 58년 만에 적자를 내고 감산에 돌입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로서는 노사가 힘을 합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관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지금이 감투싸움이나 할때가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문화수도특위)가 불쌍 사나운 ‘감투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문화수도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과 기존 특위 위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부터 활동해온 문화수도 특위는 12일 본회의에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특위 전 위원 일괄사퇴’를 골자로 한 ‘문화수도 특위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기존 특위위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명분은 문화수도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지만 속내는 위원장과 위원 등이 서로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에서 비롯됐다. 특위활동 연장에 이어 위원장 연임이 가시화될 경우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문제는 문화수도 특위의 불지각한 감

투싸움으로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당장 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문화수도 특위의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빨라야 내달 17일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때 특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보고나 토론회, 문공부와의 관계모색 등 문화수도 특위 업무는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요즘 지역사회는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7개월째 문화전당공사가 중단된 비상상태다 다르다. 지난 8일부터는 하루 1천만 원씩 공사지체 부담금을 시공사에 지불하고 있다. 만약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는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신속한 공사재개를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한가하게 감투싸움이라니. 도대체 제정신인가.

/연합뉴스

美 뉴욕주 여객기 추락

탑승자 48명 전원, 주민 등 49명 사망

12일 오후 10시 15분경(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 인근 주택가에 소형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48명 전원과 주민 1명 등 49명이 숨졌다고 AP통신과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사고기는 뉴저지주 뉴이리 공항에서 출발해 버펄로 나이에가라 공항으로 향하던 콜린항공 3407편으로, 50인승 소형 여객기인 이 비행기에는 모두 44명의 승객과 4명의 승무원 등 총 48명이 탑승해 있었다.

FAA 로라 브라운 대변인은 사고기가 목적인 나이에가라 공항까지 불과 10km가량을 남겨두고 착륙 5분 전에 클라렌스센터라는 마을에 추락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대변인은 추락 직전 3407편으로 부터 긴급 조난 신고는 없었다면서 비행기가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추락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전원 사망했고, 비행기가 추락한 주택에 있던 주민 1명도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고 당시 기상은 약한 눈발이 날리고 구름과 안개가 낀 상태로, 시속 27km 가량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개선 화염이 수구초 소방단원이 불길을 잡기 위해 긴급 출동했고, 현장 인근의 주택 12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모두 긴급 대피했다.

/연합뉴스

美 의회 ‘바이 아메리카’ 조항 합의

미국 상원과 하원이 7천8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합의하면서 “강력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도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스콧 폴리 제조업연합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무역분쟁 논란을 촉발시킨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경기부양법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건설 공사에 철강 제품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만을 사용토

록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상·하원이 합의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은 상원에서 통과됐던 법안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폴 사무총장은 상·하원 합의안에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통상 약속에 맞게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중두



이 난리통에 겁나고 자시고가 뭐 있나?

우리 과학위성 1호, 美 군사위성과 충돌할 뻔

지난해 431m까지 접근 비껴 가

지난 10일 사상 처음으로 우주 궤도상에서 인공위성 2개가 충돌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과학위성 1호도 미국 군사위성과 충돌할 뻔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KAIST 인공위성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 오후 10시께 우주상공 650km 지점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과학기술위성 1호’와 ‘미 군사위성’이 불과 431m의 거리를 두고 빗겨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우주 상공에서 431m의 거리는 지상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두 대가 10cm의 거리를 두고 교차 주행한 것과 같은 정도의 근접

비행이라는 게 KAIST 인공위성센터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 정보당국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한국의 과학위성 1호의 궤도 수정을 공식 요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학위성 1호에는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추력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 궤도 수정이 불가능함을 미국 측에 통보했고 별도의 위치 조정작업이 두 위성이 ‘아슬아슬’하게 근접 통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 10일 시베리아 상공 800km 우주 궤도상에서 미국의 이리듐 상업 통신위성과 지난 1993년 발사돼 기능이 중단된 러시아의 통신위성이 충돌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1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점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정기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경제부 2200-612	사건부 2200-691	사회1부 2200-612	조사부 2200-571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